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 에너지 소비 감축

전주시, 오늘부터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홀짝제)' ·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

전주시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발맞춰 고강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새벽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전주시 출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에 대해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한층 강화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청과 구청·출원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수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를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승용차(10인승 이하)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돼 요일별로 지정



8일부터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 시행' 강화된 차량 부제 운영을 하루 앞둔 7일 어느 임시주차장 입구에서 정부 청사관리본부 직원들이 2부제 운영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8일부터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된 차량 끝자리 번호는 해당 주차장에 진입 및 주차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전통시장과 한옥 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은 이번 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당분간 자율 참여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긴급 자동차 및 보행자 차량 등 취약계층과 특수 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번 2부제 및 5부제 제

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운동용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 사회부터 뼈를 깎는 실천수범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 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날짜와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어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영유아 독서 첫걸음 지원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추진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이 영유아기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책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6일부터 운영되며, 시는 현재 참여할 영·유아 가족을 모집하고 있다.

사업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라 생후 6개월부터 48개월까지 연령 대별로 나누어 운영되며, 책놀이와 책꾸러미 배부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각 12가족 규모로 운영되며, 영유아의 초기 독서 경험 형성과 부모 참여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어 생후 25개월부터 48개월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5가족 규모로 운영되며, 책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걸쳐 건지·삼천·효자·송천·인후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운영되며, 세부 일정과 운영 내용은 도서관별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시는 0~12개월 및 13~48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프로그램 참여 시 책 꾸러미도 제공한다.

꾸러미 수령을 희망하는 가족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아기수첩)를 지참해 참여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또는 각 도서관에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602)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지표투과레이더로 지반 침하 예방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선제적 대응 5개년 탐사 올해 마무리 예정

전주시가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이하 GPR) 탐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도심지 지반 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실시한 5개년 GPR 탐사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가 도입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 아래로 레이더파를 투사해 지하 객체를 조사하는 비파괴 진단 기술이다.

이 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주로 노후 하수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동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전주시역 도로 577km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추진된 서신·중앙·진북·팔복동 일원 223.92km를 포함해 총 475km에 대한 탐사를 완료했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복동과 삼천동, 효성동 일대의 하수관로 102km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탐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 작업을 실시해 사고 위험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지난 5년간 체계적인 GPR 탐사를 통해 전주시 주요 도로 밑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관리해 왔다"면서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팔복·삼천·효성동 일대 역시 철저한 탐사와 신속한 복구를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집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 일방상수도뿐만 아니라 먹는물공공시설(약수터)과 간이급수시설 등 모든 먹는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샘물인 동서화동 좁은목약수터와 완산칠봉약수터 등 2곳을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해 먹는물공공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두곳은 하루 평균 각각 300여 명과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도심 외곽 지역과 고지대 등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지하수를 취수해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도 중인동 원종인·도계마을과 평화동 작지마을, 노송동 마당재 등 4개 마을에 설치돼 있다. 이들 4개 마을에서는 101세대 145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는 수도법에 의거해 이들 시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경우 일반상수도 시설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매월·분기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민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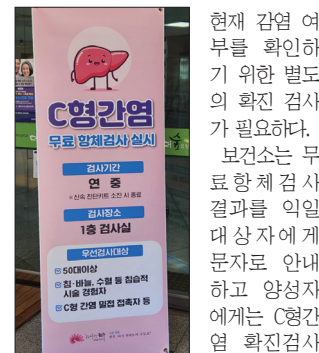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해 50대 이상 전주시민과 C형간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전주시역 23개 요양병원 의료종사자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감염 취약 대상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검사하기 위해 전주시역 23개소 요양병원을 방문해 항체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혈액매개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노출 후 관리 등도 함께 안내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안내하는 등 검사 및 치료 독려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